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9. 5.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 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중국, 교육과 보건 분야 뇌물 근절 공언 1
- 축구계 부패 폭로한 기자 가나에서 총격 피살 3
- 2018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반부패 노력이
정체된 것으로 밝혀져 5
- 싱가포르, 트럭 기사들로부터 1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게차
기사에게 징역 및 벌금형 선고 8
- 2020 도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올림픽 관련 부패 의혹으로 사임 ... 10
- 듀크대 공익신고자, 연구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합의금 중 3천300만
달러 이상 받게 될 것 13

II 국제회의 동향

- '19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6
- 제2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8
- 2019년 청렴주간회의 20

III 옴부즈만 소식

- 시에라리온: 신임 옴부즈만 임명 22
- 영국: 일상적 고관절 수술 이후 잇따른 조치 실패로 여성 사망 ... 24
- 요르단: 신임 위원장 임명 27
- 에티오피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28
- 체코: 직장 내 나이 차별 29
- 중국: 홍콩 신임 옴부즈만 취임 31

IV 참고자료

- 2018 부패인식지수 32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중국, 교육과 보건 분야 뇌물 근절 공언 (Reuters, 2019.1.14)

중국의 올해 반부패 정책은 국민이 더 큰 성취감과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 중국이 올해 부정부패 단속의 초점을 교육과 의료, 환경보호 및 기타 주요 민생현안에 맞추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뇌물 감시기관이 밝혔다.
- 시진핑 주석 행정부 임기 중 부정부패 근절은 중요 우선과제였다. 지난 달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뇌물 문제에 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뿌리 깊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일요일, 올해 반부패 정책의 초점은 '민생' 관련 분야에 맞춰질 것이며 그 목표는 '대중이 더 큰 성취감과 더 큰 행복, 더 큰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 올해 중국의 반부패 시책은 또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및 기타 범죄 행위, 그리고 금융 부문의 뇌물, 권력 남용, 배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 위원회는 또한 '이익집단'이 저지르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은 직접적인 부정부패 외에도 정부의 관료주의적 경향을 완화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임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교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은 또한 국제 반부패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국외로 도피한 용의자들을 뒤쫓겠다는 계획이다. 월요일 관영 중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월에 해외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 441명이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 중국일보는 사설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감히 어떠한 부정행위도 생각하거나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 중국일보는 또한 지난해 약 621,000 명 가량이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51명은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 소속 혹은 그보다 고위 공직자였다고 밝혔다.

※ 원문기사 : China promises graft crackdown in education, health (Reuters, 2019.1.14.)

축구계 부패 폭로한 기자 가나에서 총격 피살 (The Guardian, 2019.1.17)

아프리카 축구계 부패를 폭로한 가나 출신 기자가 가나 아크라에서 귀가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 아프리카 축구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데 일조했던 가나 출신 기자가 가나 아크라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 아메드 후세인(Ahmed Husein)은 언론인상을 받은 바 있는 아나스 아레메야우 아나스(Anas Aremeyaw Anas)기자의 취재팀 일원으로, 이들의 탐사 보도 결과로 가나 축구협회 회장이 사임하게 되었다.
- 그 결과로 나이지리아 국가대표팀 코치 살리수 유수프(Salisu Yusuf)를 포함하여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축구 심판 및 연맹 임원 수십명이 에이전트로 가장한 기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자격정지를 받았다.
- 마아메 야아 티와아 아도-단쿠아(Maame Yaa Tiwaa Addo-Danquah) 수사국장은 ‘우리 쪽 사람들이 현재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피살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후세인은 지난 수요일 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귀가하던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으로부터 목과 가슴에 총을 맞았다. 아나스는 트위터를 통하여 ‘슬픈 소식이지만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아메드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 피살 이전 후세인은 가나의 정치인 케네디 아가퐁(Kennedy Agaypong)이 민간 TV 채널에서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아가퐁은 TV에 출연해서 후세인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몹시 위험한 자인데, 여기 마디나에 살고 있다. 이 사람을 보면 두들겨 패줘라’라고 말하며 후세인을 응징하는 자신의 지지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 아가퐁은 지역 라디오 Neat FM에 출연해 ‘후세인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내가 아니라 후세인이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 후세인과 그 대장은 우리 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후세인의 '살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사 및 가나 당국에 대하여 '언론에 대한 위협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 가나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201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조사 결과 180개국 중 2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대비 세 계단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나스가 '협박 전화, 위협 메시지, 집 근처의 의심스러운 차량 출현' 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아나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규탄한 바 있다.
- 사법체제 내에 존재하는 뇌물 문제를 폭로한 후세인은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 가나 언론 규제 당국 야우 보아두-아예보아포(Yaw Boadu-Ayebofo) 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후세인의 피살을 규탄했다.
- 가나의 언론인들은 지난해 탐사보도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34세의 기자 후세인의 피살을 강력히 규탄했다.
- 지난 10월, 국제축구연맹은 가나 축구협회 크웨시 니안타키(Kwesi Nyantakyi) 전 회장이 뇌물을 수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후 그에게 영구 자격정지 및 5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 니안타키는 정부 계약을 따내는 대가로 천백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주심 및 부심 8명 또한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53명의 협회 임원이 10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임원 14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 이러한 일련의 폭로는 격동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축구가 국가적 스포츠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 원문기사 : Journalist who exposed football corruption shot dead in Ghana (The Guardian, 2019. 1. 17.)

2018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반부패 노력이 정제된 것으로 밝혀져 (II, 2019.1.29)

조사대상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평균 43점으로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고 II는 전 세계 부패 근절의 실질적인 진전과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억제에 실패함으로써 전 세계 민주주의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패트리샤 모레이라(Patricia Moreira) 사무국장은 ‘독재 혹은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이는 지도자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및 시민 보호 강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정 부패는 민주주의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부패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제도가 부정부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 2018년 부패인식지수 산정을 위하여 1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13개의 조사 및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공공부문 부정부패 수준을 0점(심각한 부패) ~ 100점(매우 청렴) 척도로 측정했다.

부패인식지수 주요 결과

- 조사대상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평균 43점으로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에스토니아와 코트디부아르 등 20개국만이 점수의 상당한 상승을 보였고, 호주와 칠레, 몰타 등 16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현저한 하락을 기록했다.
-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각각 88점, 87점을 기록함으로써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소말리아와 남수단, 시리아가 각각 10점, 13점,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곳은 서유럽과 유럽연합 지역으로, 평균 66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지역은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평균 32점) 및 동유럽과 중앙아시아(평균 35점)였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위기

- 전 세계 민주주의 데이터와 비교분석 결과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평균 75점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한 반면 완전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은 평균 49점을 기록했다. 독재정권의 요소를 보이는 혼합체제 국가들의 경우는 평균 35점, 독재국가는 가장 낮은 평균 30점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했다.
-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로, 헝가리와 터키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 5년간 각각 8점, 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터키의 정치적 자유 등급은 ‘부분적 자유’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 하락했고 헝가리는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점수 하락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에서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시민 사회 및 언론 독립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살인을 명령하거나 묵인하는 모든 국가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했다.

지켜봐야 할 곳

- 미국은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71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4점이 하락했고 2011년 이래 처음으로 부패인식지수 점수 상위 2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미국이 견제와 균형 제도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권력 최상층의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부패인식조사 점수 역시 하락했다.
- 브라질은 지난해보다 2점이 하락하면서 35점을 기록했고, 이는 최근 7년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은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강력한 통치를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고, 그 결과 많은 민주주의적 성취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ria Rubio) 회장은 ‘우리의 연구 결과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 성공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부정부패는 우리가 조사했던 많은 국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기반이 약한 곳, 비민주적이고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그러한 약점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곳에서 훨씬 더 쉽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 전 세계 부패 근절의 실질적인 진전과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국제 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유지와 이에 대한 위협 없이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강화
 - ▲ 반부패 법령, 관행, 시행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실행 사각지대 해결
 - ▲ 특히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고 정부 지출에 대한 공공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원, 언론인의 신변 안전 및 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원문기사 : CPI 2018 shows anti-corruption efforts stalled in most countries (TI, 2019. 1. 29.)

싱가포르, 트럭 기사들로부터 1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게차 기사에게 징역 및 벌금형 선고 (Channel News Asia, 2019.2.15)

싱가포르는 아무리 적은 금액, 심지어 1달러라고 할지라도 뇌물은 뇌물이라며 지게차 운전자를 엄히 처벌하였다.

- 지난 금요일(2월 15일)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젠트 컨테이너 창고에서 일하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소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 창고 직원 자오 유춘(Zhao Yucun)은 컨테이너의 트럭 상하차를 담당하는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했다.
- 탐오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44세의 자오 유춘은 트럭에 컨테이너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7~1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2018년 3월 자오 유춘이 탐오조사국에 체포되었을 때 2.5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동전들이 그가 운전하던 지게차 흙받이에서 발견되었다.
- 자오 유춘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8년 3월 12일 사이에 뇌물로 10,865.50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자오 유춘은 트럭 기사들로부터 '소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개월과 10,863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탐오조사국이 밝혔다.
- 지게차 기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번이 올해 두 번째이다. 그 이전에는 첸 질리양(Chen Ziliang)이라는 지게차 기사가 코젠트 컨테이너 창고에서 트럭 기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월 10일, 첸 질리양이 징역 2개월 및 4,870.5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이 밝혔다.

- 트럭 운전기사 중 한 명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첸 질리앙과 다투게 되면서 2017년 10월 문제의 관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 탐오조사국은 성명서에서 ‘그 이후 첸 질리앙은 문제의 트럭 운전기사에게 1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상태가 나쁜 컨테이너를 배정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 탐오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첸 질리앙은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7~10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3월 12일 사이에 4,872.50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탐오조사국은 ‘아무리 적은 금액, 심지어 1달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조사할 의지가 있는 뇌물의 액수에 제한은 없다. 1달러의 뇌물도 뇌물이다’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뇌물을 받거나 타인 혹은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다’.
- 싱가포르에서 부정부패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의 형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 원문기사: Forklift operators jailed and fined for taking S\$1 bribes from truck drivers
(Channel News Asia, 2019. 2. 15.)

2020 도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올림픽 관련 부패 의혹으로 사임

(The Washington Post, 2019.3.19)

프랑스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올림픽위원회 다케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 지난 화요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다케다 츠네키즈(Takeda Tsunekazu) 위원장이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하여 불거진 부패 의혹과 관련하여 6월에 만료되는 임기에 맞추어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프랑스 검찰은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다케다 위원장에 대한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이끌었던 다케다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열린 일본올림픽위원회 이사회에서 6월 임기 만료 이후 재임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케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몹시 죄송하다.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사임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 시대를 열 젊은 리더가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다케다 위원장은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다케다 위원장은 ‘나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고 의혹 제기 즉시 사임하지 않았던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다 위원장은 또한 ‘큰 논란을 일으켜서 괴롭지만 내 임기를 끝마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 프랑스 당국은 지난 수년간 체육계의 부정부패 의혹 및 2016년 리오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유치신청 및 개최지 선정 투표 관련 부패 의혹을 조사해 왔다.
- 프랑스 당국은 파리에서 도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기업 블랙 타이딩스(Black Tidings)를 통하여 2억3천만엔(21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 문제의 자금 중 일부는 세네갈 출신 마케팅 회사 중역이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라민 디아크(Lamine Diack) 전 회장의 아들 파파 마사 디아크(Papa Massa Diack)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둘에 대하여 프랑스 당국 부정부패 조사 여러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다케다 위원장은 문제의 돈이 적법한 자문활동에 대하여 지급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그러나 지난 1월 열린 7분가량의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질문은 받지 않은 이후로 일본에서는 다케다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일본 메이지 천황의 증손자인 다케다 위원장은 1972년과 1976년 올림픽에 승마 장애물 종목 선수로 출전한 바 있으며, 2001년 이래로 주로 명예직으로 일본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해 왔다.
- 지난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당국이 관련 혐의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의혹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다케다 위원장의 출국과 혐의 부인으로 올림픽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부정부패 의혹을 씻어내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 미디어 컨설턴트이자 평론가인 츠루노 미츠시게(Tsuruno Mitsushige)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포함한 올림픽 관련자들은 지도부를 물같이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다케다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분명한 해명도 하지 않고 사임하고자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중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은 더군다나 더 요원해졌다'라고 말했다.

- 츠루노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다케다 위원장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어떠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 전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범무법인 대표인 고히라 노부오(Gohara Nobuo) 역시 다케다 위원장에 대한 의혹에 대응하는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 고히라 노부오는 지난 화요일 오전 중에 예정된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입장 발표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중요한 것은 다케다의 사임만으로는 도쿄의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 측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일본은 2016년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 독립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간의 조사 이후 다케다 위원장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고히라는 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 다케다 위원장은 2020 도쿄올림픽 집행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집행위원직도 사임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 위원회는 마케팅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다케다 위원장에 대한 사건 기록을 개시했다.
- 아사히신문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본 올림픽위원회 측에 다케다 위원장의 사임을 조용히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 원문기사 : Japan’s Olympic chief to step down amid corruption allegations over Tokyo 2020
(The Washington Post, 2019. 3. 19.)

듀크대 공익신고자, 연구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합의금 중 3천300만 달러 이상 받게 될 것 (NPR, 2019.3.25)

듀크대 전직 연구 분석 전문가는 듀크대 연구원이 데이터를 조작하여 상당 금액의 연구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발하였다.

- 듀크대가 연방정부 연구보조금을 타내기 위하여 허위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고발에 대한 합의금으로 미국 정부에 1억1천250만 달러를 지급한다. 듀크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조세프 토마스(Joseph Thomas)에게 3천375만 달러의 포상금이 해당 합의금으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듀크대의 전직 연구 분석 전문가 조세프 토마스는 듀크대 연구원이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국 국가보건연구원과 환경보호국 두 곳에서 상당 금액의 연구 보조금을 따내고 계속 받았다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를 대신해 듀크대를 고발했다.
- 문제의 보조금 수십 종은 쥐의 폐 기능 연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조세프 토마스의 고발 내용은 2006년~2018년 사이에 듀크대가 허위 연구결과에 대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연방기관에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했고 ‘접수되게 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번 합의로 법정 소송 사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듀크대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듀크대는 ‘2013년에 (연구) 기술자가 학교에서 자금 횡령으로 해고된 뒤 연구 비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 NPR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세프 토마스의 변호인단은 ‘듀크대의 행정처와 연구자들이 지난 7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허위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된 이후’ 해당 사안의 규모뿐만 아니라 대학 측이 충분한 투명성을 가지고 해당 사안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토마스가 사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안과 관련된 성명서에서 듀크대의 빈센트 E. 프라이스(Vincent

- E. Price) 총장은 대학의 윤리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든 듀크대 연구원들이 윤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프라이스 총장은 또한 ‘이번 사건처럼 개인이 윤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듀크대 구성원에 대한 서한에서 프라이스 총장은 ‘지금은 어려움의 시기이다’라고 말하고 ‘연구 보조금 부정수급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프라이스 총장은 또한 듀크대가 과학적 투명성 증진, 윤리교육 개선, 연구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 조세프 토마스가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의 부정부패 신고 혹은 공익신고 조항에 근거하여 원래의 고발을 제기했기 때문에, 토마스는 듀크대로부터 환수한 어떠한 합의금이든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 절차를 이행한 대가로 토마스는 합의금 중에서 3천375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 토마스의 변호인단은 토마스가 의혹을 신고하고 고발을 접수한 이후에도 정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토마스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 토마스의 변호인단은 ‘많은 공익신고 사건에서 정부는 진행 절차 중 바로 그 단계에서 ‘개입’해서 사건 해결을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 토마스씨와 우리가 앞장을 서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누리는 학계 기득권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젠트리 락(Gentry Locke), 힐리 하페만 마게 & 토마스(Healy Hafemann Magee & Thomas), 브룩스 피어스(Brooks Pierce)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토마스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여파로 고발인 조세프

토마스가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일 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상당한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 조세프 토마스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듀크대 보건시스템 연구소의 연구 분석가로 재직 중에 폐를 연구하는 부서의 연구원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부정청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토마스와 그 변호인단은 2013년 비공개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에서 문제의 폐 관련 연구부서의 전 임상연구 담당자인 에린 포츠-칸트(Erin Potts-Kant)가 해당 팀 업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정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대신' 데이터를 노골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주도면밀하고 거의 전방위적인 연구자금 편취에 연루되었다.'라고 말했다.
- 토마스의 소송에는 부정행위와 보조금 편취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를 간과한 포츠-칸트의 상급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번 사건은 학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조작된 연구가 연방정부 지침을 충족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포츠-칸트가 38개의 논문을 듀크대의 기타 연구원들과 공저자로 학술 저널에 제출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13년 고발장에는 문제의 논문 38편이 417편의 다른 논문에 의해 인용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 논문감시 사이트 리트랙션 워치(Retracton Watch)에 따르면 현재까지 포츠-와트와 관련된 과학 학술논문 중 17편이 철회되었다.
- 조세프 토마스가 미 정부를 대신하여 듀크대에 제기한 소송은 잠정적으로 지난해 11월에 해결됐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 법무부에서 해당 건을 승인하는 데 빠르게 나서지 않았다.
- 이번 합의 건은 지난 월요일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 이후 공식 발표되었다. 해당 사건의 소송 기록에는 거의 300건의 동의와 명령, 기타 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원문기사 : Duke Whistleblower Gets More Than \$33 Million In Research Fraud Settlement (NPR, 2019.3.25)

2 국제회의 동향

1 '19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21.(월) ~ 1.23.(수), 일본 도쿄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일본, 멕시코)
 - 참석 : G20 회원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ADB 등 국제기구 대표 및 EU 등 지역 기구 대표, TI 등 시민사회 대표 및 B20를 대표하여 일본 기업가 참석
- ※ 우리측 :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최진경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 검사

2. 회의 주요 결과

- 2019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 우수사례 가이드' 작성을 목표로 첫 번째 논의를 진행
- 참석자들은 공공자금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비용의 10-30%가 부패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다는 점 등 인프라 부패방지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whistleblower라는 표현이 범세계적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UNCAC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바, G20 고위급원칙상 동 단어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산회복에 대한 MLA 현황과 국제회의 (ARIN-AP)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OECD는 작년 10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과 G20 부패방지실무그룹간의 공동 세션 결과를 보고하며 아직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G20 회원국의 가입을 촉구함

3. 위원회 활동 내용

- 우리 대표단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발표 세션을 통하여 신고대상 법률 확대,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 이행 강제금 상향 등 최근의 법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신고자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
- 또한 대표단은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 우수 사례 가이드」 초안에 대한 논의시, 인프라 또는 개발과 관련된 용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 개발’이 지칭하는 범주와 정의를 적시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
- 사우디아라비아 국립 부패방지 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측은 우리에게 자국의 국가적 부패 방지제도 정비 계획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 및 전략에 대하여 문의
- 일본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와 양국 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교하고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등 향후 양자적 협력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2 제2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2. 25.(월) ~ 3. 4.(월), 칠레 산티아고
- 참석자 : APEC 회원국(20개국*), OECD, TI 등 국제기구 70여명
 - * 21개 APEC 회원국 중 페루 불참
 - ※ 우리측: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참석

2. 회의 주요 결과

- 제28차 ACTWG 회의
 - APEC 13개 회원국이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
 - ACTWG 15주년 기념 성명서 작성, 작업계획 및 전략계획안 개편 및 아·태지역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 전문가 의견 청취
- APEC 반부패 워크숍
 - (전자정부 워크숍) IC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부패예방 매커니즘 운영방안과 도전과제 및 APEC 국가의 모범사례 공유
 - (워킹그룹 합동 워크숍) 젠더, 통관 분야, 중소기업 등으로 반부패 논의주제를 확대하여 부패 예방·척결방안 논의
- 위원회 주요 활동
 - 한국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소개 및 국제동향 청취
 - 반부패 워크숍과 ACTWG 회의에서 한국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 의지와 성과를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반부패 활동정보 수집
 - 2020년 제19차 IACC 개최 홍보 및 국제사회협조 요청
 - 중국, 칠레 등 각국 반부패 기관 대표와 UNDP, 월드뱅크 등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2020년 IACC 개최 홍보

3. 관찰 및 평가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를 통해 부패인식지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견인
- 2020년 성공적인 제19차 IACC 개최를 위해 APEC 등 다자간 반부패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불입 분위기 조성 주력
 - 2020년 제19차 IACC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한 국제 반부패 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확인하였으며,
 - 향후 APEC, G20, OECD 등 다자간 협의체 회의 참석시 제19차 IACC 날짜·장소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 진행 필요

3 2019년 청렴주간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3. 19.(화)~22.(금)/프랑스 파리
- 청렴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연 2회)
 - 청렴/반부패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경험 및 모범사례 발표, 정책적 시사점 공유 등
- 청렴포럼(Integrity Forum, 연 1회)
 - 청렴·반부패 증진을 위한 연례 OECD청렴주간('13~)의 주요 행사
- 감사연맹 연례회의(Auditors Alliance Annual Meeting, 연 1회)
 - 회계 감사를 비롯한 청렴 감사 관련 내용 논의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초청국(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등)대표단
- 참석자
 -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감사원 감사위원, 법무부 검사,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등
 - 30여 개국 대표단

2. 주요 결과

- Ms. Anne Rivera (스위스)와 Ms. Silvia Spath (독일)이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칠레와 노르웨이에서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합의
- OECD는 자체적 공공청렴지수를 개발중이며 인식(perception) 수준과 국가별 순위 측정에서 벗어난 지표 개발을 위하여 TF팀을 운영 중임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권고안 이행 핸드북 수정안을 작성, 차기 회의 전까지 공유할 예정

3. 관찰 및 평가

- 청렴작업반(SPIO)은 비회원국의 권고안 도입 시 청렴작업반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OECD 공공청렴 권고안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작업반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또한,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OECD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CPI에서 사용하는 인식지수와 국가별 순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시에라리온: 신임 옴부즈만 임명 (IOI, 2019.1.10)

- 2018년 10월 23일, 시에라리온 공화국의 대통령인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 전 준장이 레온 젠킨스-존스톤(Leon Jenkins-Johnston) 변호사를 신임 시에라리온 공화국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
- 레온 젠킨스-존스톤 변호사는 영국 울버햄튼 대학(University of Wolverhampton)과 제휴한 런던 홀본 법학대학교(Holborn Law College London)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 젠킨스-존스톤 신임 옴부즈만은 그 이후 영국 본머스 대학(University of Bournemouth)에서 국제상법 대학원 과정을 수학했다.
- 젠킨스-존스톤 변호사는 2005년 시에라리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 2007~2010년에는 법무법인 젠킨스-존스톤의 변호사로 일했고 2008~2010년에는 시에라리온 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UNDP 후원사업을 위한 시에라리온 변호사협회팀을 이끌었다.
- 2013년에는 법무법인 젠킨스-존스톤의 책임 파트너 변호사로 지명되면서 법원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리,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의 업무 평가, 윤리 규정 시행 및 법인 안전성 유지 임무를 수행했다.
- 2016년 5월에는 시에라리온 수석재판관으로부터 국가공인 공증인 위원회 위원장직에 종신 임명되었다.



- 2013년 6월~2018년 6월에는 국가법률구조위원회 시에라리온 변호사협회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정부 시책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법률구조위원회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 레온 켄킨스-존스톤 변호사는 또한 열성적인 인권 옹호자로 알려져 있으며, 시에라리온의 유명 사건들을 담당해 왔다.

※ 출처: SIERRA LEONE ‘Introducing the newly appointed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019.1.10.)

영국: 일상적 고관절 수술 이후 잇따른 조치 실패로 여성 사망 (ICJ, 2019.2.27)
 병원 측은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환자에 대한 주의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과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

민원

- L씨는 자신의 모친이 일상적 고관절 수술 전·후에 국가 의료서비스 기관이 적절한 주의와 치료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배경

- 2014년 12월, L씨의 모친은 고관절 치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발견되었고 이는 L씨 모친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며칠 후 마취과 의사가 이러한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L씨의 모친이 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추가 혈액검사에서 L씨 모친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더 높아졌고, 이는 신장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한 검사 결과가 병원 임직원이 접속할 수 있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었다.
- L씨 모친에 대한 고관절 치환수술은 2015년 2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술 집도자의 수술 후 주의사항에는 규칙적인 사후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환자를 관찰했던 간호사들은 야간에 환자의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 채로 유지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전문의나 수간호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 역시 하락했다.
- 다음날 아침 환자를 검사한 의사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40%나 떨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후 혈압 회복을 위하여 수혈과 수액 투여가 이루어졌고, 의사는 환자의 신장 상태를 고려했을 때 체액평형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튿날 아침,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의사는 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날

오후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더 떨어져서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CT촬영 결과 환자의 비장과 신장, 장에 대한 혈액 공급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에 필요한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일부 장기에 괴사가 일어났다.
- 또 다른 CT촬영 결과 환자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절개 부위 주변에 체액과 혈전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2015년 3월, L씨의 모친은 중환자실 입원 중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생긴 상처 감염 치료를 위하여 두 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야간에 환자가 낙상하면서 고관절이 탈구되었고, 의사들은 다시 한 번 전신마취 고관절 수술을 시행했다.
- 사흘 후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의 직접적 사인은 허혈성 대장염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대장 혈액 공급 손실로 발생하는 궤양, 감염, 출혈).

옴부즈만 조사 결과

- 옴부즈만은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병원 측이 L씨 모친의 급성 신부전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사후관찰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환자의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후 검사가 필요했다. 혈액검사 결과와 환자의 연령, 당뇨병 병력을 감안했을 때 환자가 수술 후 급성 신부전을 겪게 될 위험이 컸다.
- 체액균형 모니터링에 대한 분명한 지시사항이 부재했다. 체액균형 관련 지시사항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거나 기록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탈수가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 환자의 혈압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책임자급의 의료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다. 환자의 혈압과 크레아티닌 수치, 체액균형 수치에 대한 관찰이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관찰 간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신속히 발견 및 치료하지 못 했다.

- 옴부즈만은 이러한 일련의 실패로 인하여 환자의 체내 기관이 약화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허혈성 대장염을 이겨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보상 조치

-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병원 측은 L씨 모친에 대한 주의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 병원 측은 또한 미흡한 치료를 인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을 시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 출처: UK ‘Avoidable death of woman after multiple failings following routine hip operation’
(IOI 홈페이지>News, 2019.2.27.)

요르단: 신임 위원장 임명 (IOI, 2019.3.13)

○ 2019년 3월 5일, 무한나드 히자지(Muhannad Hijazi) 소장을 모함메드 알 알라프(Mohammed Al Allaf)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요르단 청렴·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칙령이 발표됐다.



○ 판사직을 은퇴한 무한나드 히자지 소장은 군사 재판소장 및 국가안보법원 검찰총장직을 역임했다.

○ 히자지 신임 위원장은 또한 국가안보법원 검사직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국가안보 및 경제 사건을 담당했다. 군사재판소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군사항소법원장직을 수행했다.

※ 출처: JORDAN ‘New Chairperson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019.3.13.)

에티오피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IOI, 2019.3.18)

- 2018년 6월, 엔달레 하일레(Endale Haile) 박사가 전임 포지아 아민(Fozia Amin) 의원을 뒤이어 에티오피아 대표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하일레 박사는 교육계 출신 인사로, 5년간 에티오피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 하일레 박사는 아디스 아바바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2010년) 및 공공정책관리 박사학위(2017년)을 취득했다. 하일레 박사는 또한 데브레 마르코스 대학에서 교육학 전문학사를 취득했다.
- 하일레 박사는 초·중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종사했으며 1995~2004년 암하라주(州) 행정공무원으로 일했다.
- 하일레 박사는 2006~2011년 에티오피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후 교육계로 돌아가 2012~2015년 대학교수를 역임했다.
- 2015년에는 데브레 베르한(Debre Berhan) 대학의 행정·학생부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어 3년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 후 2018년 대표 옴부즈만에 임명되었다.
- 엔달레 하일레 박사는 1972년 2월 12일 에티오피아 동부 고잠 지구에 위치한 데젠에서 출생했고 현재 기혼으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 출처: ETHIOPIA 'Introducing the new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019.3.18.)

체코: 직장 내 나이 차별 (IOI, 2019.3.21)

체코 옴부즈만은 고용주가 65세 이상 고용인에 대한 차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원을 고용주에게 공개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노동감시국의 활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체코 옴부즈만이 직장 내에서 나이에 따라 고용인들을 차별대우하는 고용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민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인들은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임금을 조달하는 채용과 관련하여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공받았다. 민원인은 지역노동감사국에 그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고용주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직후 민원인은 고용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노동감사국은 조사를 실시했고 차별 금지 조항의 위반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1년이 지난 후 해당 고용인의 행정위반 혐의의 시효가 만료되었다.
- 해당 건에 대한 당국 조사 결과, 문제의 고용주가 고용인의 나이를 근거로 차별대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용주는 65세 이상의 고용인들과는 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고용계약을 맺고 이들의 근무시간의 50%에 대해서만 제도 내 예산(즉, 확실히 확보된 예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정된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의 규칙을 적용했다. 이러한 규칙은 65세 이상 고용인의 근무시수가 때때로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보다 나이가 적은 고용인들은 무기한 상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고정 예산 내에서 지급됐다. 이러한 관행은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연구 근로자)에 근거하여 객관적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행위였다.
- 노동감사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은 감사국이 실수로 민원인의 신원을 고용주에게 공개하고 이로 인해 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당국은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지체 없이 처리하지

못했고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당한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 옴부즈만은 당국의 후속 조치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결론짓고, 추가 개선 조치를 제시하는 최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즉, 노동감시청에서 향후 조사 시 조사관들이 민원인의 신원을 법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민원인이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혹은 그러한 절차가 진실을 밝히는 데 정당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공개)
- 노동감시청은 옴부즈만이 제시한 개선 조치를 채택했고 모든 감사관이 옴부즈만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체코 당국은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출처: CZECH REPUBLIC ‘Age discrimination at work’ (IOI 홈페이지>News, 2019.3.21.)

중국: 홍콩 신임 옴부즈만 취임 (IOI, 2019.4.1)

- 홍콩의 위니 치우 와이-인(Winnie Chiu Wai-yin) 신임 옴부즈만이 2019년 4월 1일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행정수반이 옴부즈만 조례에 따라 신임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 치우 신임 옴부즈만은 36년간 홍콩 경찰에 몸담으면서 수사와 작전, 정책 기획 및 인사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 치우 신임 옴부즈만은 또한 뛰어난 지도력과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상 최초의 여성 경찰부국장으로서 치우 신임 옴부즈만은 시민의 존경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경찰로서 보여준 치우 신임 옴부즈만의 뛰어난 업적은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잘 보여준다.
- 전임 코니 라우(Connie Lau) 옴부즈만의 임기는 2019년 3월 31일 만료되었다.



※ 출처: CHINA 'New Ombudsman of Hong Kong takes office' (IOI 홈페이지>News, 2019.4.1.)

4

참고 자료

1. 2018 부패인식지수

※ 출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 2018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많은 국가에서 부패 억제에 계속 실패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과 지역의 전문가 및 기업인에게 자국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수준을 0~100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0점으로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뜻이며, 100점은 매우 청렴함을 나타낸다.
- 조사대상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올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50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평균 지수는 43점이었다.
-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이 실질적인 반부패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각각 88점과 87점을 기록했다. 최하위권에는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이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 10점, 13점, 13점을 기록했다.
-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국가는 없지만,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곳들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가치 보호에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년간 에스토니아, 세네갈, 가이아나, 코트디부아르 등 20개국만이 부패인식지수의 의미있는 상승을 기록했다.
- 또 한 가지 문제는 호주, 칠레, 몰타, 헝가리, 터키 등 16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역별 분석

① 아태지역: 반부패 진보 미흡 또는 전무

지역 상황

- 올해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에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획득한 뉴질랜드가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태지역의 부패인식지수 1위,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 2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를 적은 점수차로 뒤따르는 싱가포르를 85점, 호주는 77점을 기록했다.
- 하위권에는 지속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이 14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16점)과 캄보디아 (20점)이 아태지역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했다.
-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 평균 44점을 기록한 아태지역은 반부패 노력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아태지역은 반부패 성취 실패의 측면에서 미주지역 (평균 44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서유럽이나 유럽연합지역 (평균 66점)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아태지역에서 반부패 노력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참정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위기

- 뉴질랜드와 호주 등 아태지역에서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원활히 기능하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부패인식지수에 기여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대체적으로 비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억제하고 있는 곳이 존재한다.
-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일부 국가 및 지역과 독재 국가에서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폴과 홍콩의 경우, 이들은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보유한 아주 작은 지역이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가 성공적으로 방지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지속가능한 반부패 인프라의 존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적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캄보디아와 태국 등 아태지역 전반의 반부패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점수 상승

- 아태지역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가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순위 상승 및 하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지수 향상을 기록한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 태평양 지역의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가 각각 46점, 44점을 기록하면서 점수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5점이 상승한 솔로몬제도는 새로운 반부패위원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부패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국제투명성기구 솔로몬제도지부(Transparency Solomon Islands)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는 그 자매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 3점의 점수가 상승한 바누아투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더 높은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바누아투 지부(Transparency Vanuatu)는 법안 작성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마지막으로, 57점을 기록한 대한민국 역시 2017년과 비교하여 3점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수년간 전 대통령 및 기업인 등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한국의 사법체계를 포함한 사회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 이 세 곳 모두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제도가 부패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시민의 참여와 시민

운동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에서는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었다.

-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대한민국은 또한 모두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젊은 활동가들이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히 벌어진다.

점수 하락

- 티모르-레스테(35점), 방글라데시(26점), 몰디브(31점), 베트남(33점) 등 아태지역 국가 몇몇이 2017년 대비 2~3점의 부패인식지수 하락을 기록했다.
- 이들은 반부패 노력에 역행하는 몇몇 공통점을 보인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 민주주의 제도가 부재하고 언론의 자유와 개방성을 제한하고 시민의 참여를 억압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이행이 약화되고 참정권이 축소되면서 부정부패가 악화 및 강화되고 있다.
- 베트남은 지난 수년 간 부패를 저지르는 개인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강력한 법 집행 노력은 종합적·효과적 반부패 전략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력하지 못한 민주주의 제도와 참정권의 부재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부패인사 체포 및 기소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 베트남은 덴마크, 일본, 미국이 연루된 최근 부패 스캔들 몇 건에 연관되어 있다. 2015년, 일본과 미국 당국은 베트남 정부 계약 혹은 개발 원조에 대한 대가로 자국 기업들이 베트남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7년에는 세계은행이 덴마크의 컨설팅 회사를 베트남 정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자격정지 시켰다.

더 지켜봐야 할 곳

- 아태지역 국가들의 대부분이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점수 정체 및

하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히 말레이시아(47점), 몰디브(31점), 파키스탄(33점), 인도(41) 등이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정치적인 진보를 보였다.

- 이 네 곳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투표를 통하여 폭넓은 반부패 개혁을 공약하는 신임 정부가 탄생했다.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묘한 형태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패를 근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그러한 발전이 어떻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선거 이후 주요 부패 공직자의 체포 등을 포함하여 반부패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MDB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1MDB 스캔들의 규모는 미화 4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전 총리를 포함한 정부 최고위 인사등 정계 지도자 다수가 이에 연루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 금융거래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 인도에서 올해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인도의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40점에서 2018년 41점으로 1점 상승하면서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정부의 부패 근절 행동과 폭넓은 잔 록팔법(Jan Lokpal Act)의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시위가 벌어진 이후 반부패 노력은 결국 힘이 빠지고 동력을 잃게 되었으며 인도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반부패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라졌다.

권고사항

- 아태지역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기록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반부패 노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태지역 각국 정부는 반부패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각국의 부패를 근절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부패와 같이 뿌리가 깊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전략이 핵심이다.

-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령, 반부패 기관의 권한 강화 등 올바른 방향의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부패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기소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인프라와 처벌, 규정의 적절한 시행, 예방 메커니즘 및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한 전반적 반부패 제도에 주안점을 두는 견고하고 종합적인 전략의 존재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 ▲ 비민주적인 정치 엘리트 혹은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반부패 노력의 작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부패에 맞서싸울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들에는 장기적 반부패 노력의 전보를 저해하는 몇몇 비민주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취약한 민주주의적 제도, 법, 규제, 집행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소수의 독재국가에서 일부 점진적 진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는 시민이 이끄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태도 혹은 기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법 독립성과 같이 모든 반부패 이행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과 기타 민주주의 제도 및 실행 없이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②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비민주적 정권이 반부패 노력 방해

지역 상황

- 아프리카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이다. 49개국 중 8개국만이 100점 만점에 43점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을 아프리카 반부패의 해로 지정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보였던 열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지는 못했다.
-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세이셸로, 100점 만

점에 66점을 받았다. 보츠와나와 카보베르데가 각각 61점과 57점을 기록하면서 세이셸을 뒤따랐다.

- 7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소말리아로 10점을 획득했으며, 13점을 받은 남수단과 함께 이 지역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보였다.
- 평균점수가 32점에 그친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지역으로서 평균 35점을 기록한 동유럽, 중앙아시아와 함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위기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극명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차이, 그리고 오랜 도전과제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국가들 중 대부분이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원칙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독재자 혹은 독재자에 가까운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독재정권, 사회 갈등, 취약한 제도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체도가 계속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 같은 지역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한 세이셸과 보츠와나 등의 국가에는 몇몇 공통점이 있다.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는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점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원칙이 위협에 처해있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일반적인 예라기 보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다.

점수 상승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부패인식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반부패 노력을 계속하면서 현저한 진전을 이룬 국가들도 있다.
-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은 2년 연속으로 부패인식지수 상의 상당한 향상을 보였다. 지난 6년간 코트디부아르는 2013년 27점에서 2018년 35점으로 점수 상승을 기록했고, 세네갈은 2012년 36점에서 2018년 45점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이러한 성취는 양국에서 이루어진 법적, 정책적, 제도적 개혁과 각 국가 지도자가 보여준 반부패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 37점을 얻은 감비아는 지난해보다 7점 상승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세이셸은 6점이 상승하여 66점을 기록했다. 에리트레아의 점수는 4점 상승하여 2018년 24점을 기록했다. 감비아와 에리트레아에서는 법, 제도, 이행과 연관된 정치적 의지가 부패 억제에 기여했다.

점수 하락

- 지난 수년간 브룬디, 콩고,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가나 등 일부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 지난 7년간, 모잠비크의 점수는 2012년 31점에서 2018년 23점으로 8점 하락했다. 정치평론가와 취재기자에 대한 납치·공격 증가로 인하여 부패 근절에 치명적인 두려움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던 모잠비크의 전직 공무원들이 미국 공무원에 의하여 고발당했다. 전 재정장관이자 크레딧 스위스 출신의 마누엘 창(Manuel Chang)은 비밀 대출과 뇌물로 미화 20억 달러 이상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낮은 점수를 기록한 많은 국가들에는 국민의 참정권 부재, 제한적 언론 자유, 취약한 법치주의 등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종종 법이 집행되지 않고 제도를 이행할 인력이 부족하여 부정부패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상의 내부 충돌과 불안정성이 높은 부패율을 야기하고 있다.

지켜봐야 할 곳

- 앙골라,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긍정적 정치상황 전개를 고려했을 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신임 정권이 앞으로 반부패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나이지리아는 2017년과 같은 점수인 27점을 기록했다. 부패는 2015년 선거 시까지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였고, 올해 2월 대선까지

주요 국가 의제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 나이지리아 부하리(Buhari) 행정부는 특히 반부패 대통령자문위원회 창설, 공공조달 및 자산신고 분야에서 법적·정책적 반부패 체계 개선, 국가 반부패 전략 개발 등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다수의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의도했던 결과를 낳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 19점을 받은 앙골라는 2015년보다 4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앙골라의 주앙 로렌수(Joao Lourenco)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Eduardo Dos Santos) 전임 대통령의 딸 이사벨 도스 산토스(Isabel Dos Santos)를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공직자를 해고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부패 척결에 힘써왔다. 최근 전임 대통령의 아들 호세 필로메노 도스 산토스(Jose Filomeno Dos Santos)가 앙골라 국부 펀드로부터 미화 5억달러 이상의 허위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앙골라의 부패 문제는 도스 산토스 일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 정권이 앙골라의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7년과 동일한 점수인 43점을 기록했다. 라마 포사(Ramaphosa) 대통령의 행정부는 부처간 반부패위원회 업무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NACS)이 지난 수년간 존재하기는 했지만 현 행정부는 대중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더 큰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 참여와 부패, 권력남용 사건 조사를 위한 여러 위원회 등 다양한 긍정적인 발전이 남아공에서 나타났다. 조사 위원회 중 하나인 존도(Zondo) 위원회는 이익단체의 국정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아공관세청의 조세행정 및 거버넌스에 주안점을 두는 조사위원회도 있다. 이전의 조사위원회들이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임 정권이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남아공의 최근 반부패 노력 사례로는 또 가우텡(Gauteng)주(州) 보건부의 부패 관련 특수수사대 보고서가 있다. 지난 행정부 때에는 이 보고서가 빛을 보지 못했으나, 라마포사(Ramaphosa)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여당 의원 등 몇몇 저명인사의 부패 혐의가 보고서를 통하여 드러났다.
- 케냐와 남아공 모두 시민들의 부패 근절 노력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가 부패에 대한 공론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국가의 일반 시민들이 정보에 즉각 접근할 수 있으며, 이전 세대에게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반부패 노력에 가장 중요한 정보 접근능력 향상으로 인하여 케냐와 남아공 정부 공직자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남아공지부(Corruption Watch)의 페이스북과 왓츠앱 페이지에 접수된 부패 신고 건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기타 신기술이 권력자들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게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권고사항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은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고 각국 부패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 ▲ 특히 브룬디, 콩고, 모잠비크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반부패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 ▲ 인권운동가, 정치 평론가, 반부패 운동가와 탐사보도 기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부패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민주주의 제도의 강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신뢰,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다.

③ **아메리카: 민주주의 약화와 반부패 노력을 방해하는 포퓰리즘 증가**

지역 상황

- 미주지역은 3년 연속 평균 44점을 기록함으로써 부패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 실패했다.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미주지역의 점수는 아태지역과 비슷하지만 (평균 44점), 서유럽이나 유럽연합지역보다는 낮다 (평균 66점).
- 미주지역에서는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았다.
- 캐나다를 뒤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4점 하락한 71점을 받으면서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70점을 기록한 남미 지역 우루과이 및 68점을 기록한 카리브해 지역의 바베이도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 순위 하위권에는 18점을 받은 베네수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만연한 고질적·전반적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아이티(20점)과 니카라과(25점)이 미주지역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패와 민주주의의 위기

- 미주지역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 포퓰리스트 정권과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적 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미국)과 보우소나루(Bolsonaro) 대통령(브라질),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대통령(과테말라), 마두로(Maduro) 대통령(베네수엘라) 등, 미주 지역은 다음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 스타일의 부상을 목격하는 중이다.
 - ▲ 특히 보도의 내용이 지도자의 의도에 반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
 - ▲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한 입막음과 통제

- ▲ 유권자 탄압 및 선거권 박탈의 증가
 - ▲ 반이민, 반성소수자, 반원주민, 인종차별주의적 언어 사용의 증가
 - ▲ 부정부패 등 뿌리 깊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평이하고 '강력한'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공약의 증가
 - ▲ 견제와 균형 제도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제도에 개입 혹은 부정한 이용
 - ▲ 이해관계 충돌 및 개인적 영향력의 증가
- 불행히도 이러한 새로운 현실이은 세계적 추세인 일부로서, 미주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방식'을 독재자 스타일의 지도자가 민주주의 관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점수 상승

-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 지역 모든 국가에서 상황이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부패 근절에 있어서 인정받을만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의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34점, 35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7년에 비해 점수가 2점 상승했다. 또한 40점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2017년에 비해 1점, 2015년에 비해 8점이 상승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 이 세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인사의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공정한 기소를 보장하고 및 부패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이 이들 국가에서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유와 독립성이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수집단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엘살바도르지부(La Fundacio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FUNDE)는 시민들이 정보접근권을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그 덕분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특히 공공기관 이메일 주소, 법률 자문의 고용 절차에 대한 정보, 예술 관련 국가 지출, 무장 충돌의 희생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투명성기구 아르헨티나지부(Poder Ciudadano)는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의 재산내역 신고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덕분에 자산신고를 규제하는 퇴행적 법 조항이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다.

점수 하락

- 2012년 이후로 칠레, 멕시코, 니카라과의 점수가 현저히 하락하면서 반부패 노력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실패했다.
- 25점을 기록한 니카라과는 지난 7년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4점 하락했다. 이러한 꾸준한 점수 하락은 니카라과의 정치 지형과 최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0년 이상 집권한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제도 대부분을 통제하면서, 제도적 효율성과 독립성이 저하되었다. 최근에는 폭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르테가의 독재정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대규모 시위단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탄압하기도 했다.
- 부패인식지수 67점과 28점을 기록한 칠레와 멕시코는 2012년 대비 각각 5점과 6점의 점수 하락을 보였다. 지난 수년 간 양국 모두 엄청난 부패 스캔들을 겪었다. 여기에는 멕시코 주지사 여러 명과 칠레 경찰 등 부정부패와 무관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아 왔던 정치 지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칠레지부(Chile Transparente)는 경찰 부패 스캔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합류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과제에는 청렴성과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교육과정의 확대와 독립적인

운영 및 수사 진행이 가능한 청렴위원회의 창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멕시코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참정권이 급격히 저해되었다.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 없이 부패의 예방과 고발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지난 10년간 멕시코에서는 반부패 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헌법 개혁과 새로운 국가적 반부패 체제의 확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국제투명성기구 멕시코 지부(Transparencia Mexicana)가 구성한 폭넓은 연합체가 이러한 개혁 조치의 이행과 독립적 검찰총장실의 창설을 추진했다.

정체된 곳

-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국가 대부분은 지난해와 완전히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면서 정체를 보였다. 자마이카, 바하마, 바베이도스의 현 행정부들이 강력한 반부패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선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 자메이카의 유일한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잼(Petrojam) 스캔들의 사례는 족벌주의, 공금의 부실 관리, 기타 형태의 부패가 여전히 카리브해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 조달과 계약 수주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페트로잼은 2013~2018년 사이 미화 4천만달러 상당의 수입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자마이카지부(National Integrity Action, NIA)가 최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고 연루된 공직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켜봐야 할 곳

- 미주지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브라질은 이들이 해당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올해 71점을 기록한 미국은 지난해보다 4점이 하락하여 7년 간 가장 낮은 부패인식지수를 얻었다. 미국은 현재 견제와 균형 제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권력층의 윤리적 기준 악화에 직면해 있다.

- 이렇게 낮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한 와중에 미국은 반이민주의 포퓰리즘 정서와 증오범죄, 극명한 정치적 양극화와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부 섯다운 등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종합되어 미국의 근본적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 올해 부패인식지수 35점을 기록한 브라질은 지난해대비 2점이 하락했으며 최근 7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최근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 이전의 반부패 노력을 통하여 정당과 민간부분에서 부패를 저지른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2014년 브라질 건설 대기업 오데브레히트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기업 네트워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한 라바 자투(Lava Jato) 작전 이후 해당 스캔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돈세탁 사건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 스캔들의 자금세탁 규모는 중남미와 앙골라 및 모잠비크 까지 포함된 기타 역외지역 9개국에서 미화 7억8천8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브라질의 제도 내 많은 부분에 존재하는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의 심각한 수준을 강조한 이번 스캔들로 인하여 브라질 국민 사이에 자리한 회의주의와 절망의 정서가 드러났다. 유력한 정치 지도자 다수가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야당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패를 종결짓겠다는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 이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민주주의적 성취를 위협하는 몹시 포퓰리즘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고 말해왔다.
- 국제투명성기구 브라질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Brazil)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반부패 의제를 위한 70개의 방안이 포함된 정책 패키지를 개발했다.
-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 반부패

정책 패키지에는 제도개혁, 법안, 헌법개정, 결의안 초안과 기타 부패를 억제하고 그 전체적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제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브라질지부는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반부패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권고안

- 현재 미주지역에는 그 어떤 때보다 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미주 전 지역의 시민, 활동가, 개혁 성향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하여 반부패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특히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했던 제도를 포함한 반부패 법령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보호할 것
 - ▲ 부패 척결을 민주주의 저해나 독재 혹은 포퓰리즘 정치인의 집권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정치적 발언을 주의깊게 감시할 것
 - ▲ 언론의 자유와 참정권이 계속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를 표명할 것

④ 서유럽과 유럽연합: 반부패 노력 정체 및 민주주의 제도 약화

지역 상황

- 올해 부패인식지수 상위 20개국 중 14개국이 서유럽과 유럽연합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8점을 기록한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가 각 85점으로 덴마크를 뒤따르고 있다.
- 이 지역 하위권에는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한 42점을 얻은 불가리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2017년 대비 3점이 하락한 그리스(45점)와 지난 5년간 8점이 하락한 헝가리(46점)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 100점 만점에 평균 66점을 기록한 서유럽과 유럽연합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건한 청렴 제도를 보유한 이들 국가에서도 각 국가 차원의 청렴 제도와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나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위기

- 서유럽과 유럽연합지역 국가 중 많은 곳에서 법적 체계와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전체에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유럽연합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제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하고 법의 발효까지 이르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지난해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서유럽과 유럽연합 지역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 내부에서도 일부 민주주의 제도가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럽회의의 독립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의회 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돈세탁 자금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난 수년간 이 지역 일부 국가에서도 표적 집단에 대한 시민의 공포를 키우는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이는 정치 지도자의 집권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비민주적 원칙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단들은 종종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부 주체의 개입과 남용에 취약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민주 선거와 절차를 침해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해되었다.
- 가디언(The Guardian)지에 따르면 실제 연구 결과 유럽인 4명 중 1명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면서 포퓰리즘 정당들의 득표율이 지난 20년 대비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대중의 감시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포퓰리즘적 어법이 종종 사용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적 제도와 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 정부는 지속적으로 언론과 사법제도의 독립성에 개입하면서 이를 침해하고 있다. 양국에서 시민활동가와 독립 성향의 사상가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민이 정치에서 관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법치주의에 대한 제도적 위반 우려가 제기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해 현재 유럽연합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들 국가의 유럽연합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
- 덴마크와 같이 부패인식지수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기록한 국가들 역시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부패인식지수 상 덴마크의 공공부문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최근 불거진 단스케 은행 관련 스캔들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스케 은행의 에스토니아 지점은 30개국 이상의 통화를 이용하여 2천억 유로(미화 2천270억 달러)를 10년 이상 돈세탁 해 왔다. 국제 자금세탁의 가장 심각한 경우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흘러나간 자금이 발트해 국가에 위치한 은행 지점을 통하여 영국에 등록된 유령회사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유럽연합 지역에 유입되었다.
-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모범적 거버넌스를 증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가 역내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재 제도를 재정비하여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나 인권 유린에 연루된 유럽연합 역외의 개인이나 주체들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점수 상승

- 올해 이 지역 전역에서 점수가 정체되고 대부분 국가들이 지난해 대비

1~2점 상승에 그치면서 영국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가 두드러진다.

- 영국은 2017년 대비 점수가 2점 하락했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74점에서 80점으로 6점 상승했다. 이처럼 영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는 했지만 올해 영국의 점수는 2012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 지난해동안 영국에서는 외국에서 비용을 지불한 휴가를 떠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 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공공부문 스캔들이 몇 건 불거졌다. 또한 유럽연합 국민투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과 브렉시트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영국의 부패인식지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점수 하락

- 헝가리와 몰타는 최근 수년간 부패인식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부정부패가 악화되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최근 수 년 동안 부패인식지수 상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심각한 부패 스캔들과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각각 겪은 해에 점수가 1점씩 하락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제도적 침해에 대해 유럽연합의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폴란드의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헝가리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55점에서 2018년 46점으로 지난 7년간 9점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민주주의의 약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 독립성의 급격한 축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예로써,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과 중앙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이 최근 헝가리에서 추방되었다.
- 최근 수년간 헝가리는 ‘외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정부기구’에 제한을 부과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이민을 지지하는’ 비정부기구에 가산세를 도입했으며, 이민에 대한 지지를 형사법상 범죄로 만들었다. 이는 모두 기본 시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 헝가리는 또한 새로운 행정법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의 판사 임명권을 확대했다. 행정법원은 부정부패, 선거, 시위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이와 동시에 헝가리는 유럽연합 기금 오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헝가리 경찰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국제투명성기구 헝가리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Hungary)는 전문가 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탐사보도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몰타의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 60점에서 2018년 54점으로 지난 3년간 6점 하락했다.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시아(Daphne Caruana Galizia) 기자가 부정부패 사건 취재 중 살해당한 후 2018년 반부패대상(Anti-Corruption Awards)을 수상하기도 한 상황에서 몰타의 부패인식지수의 하락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몰타 역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과 필라투스 은행의 몰락, 부유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몰타의 시민권을 파는 ‘골든 비자’ 등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2018년 12월 유럽회의 보고서는 몰타 사법부에 심각한 법치주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 지난해보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 하락한 루마니아(47점)와 불가리아(42점)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이 가입 시에 공약한 반부패 및 사법 개혁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유럽연합 협력 검증메커니즘(Cooperation Verification Mechanism, CVM)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사법개혁과 반부패 노력 측면에서 거의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 불가리아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제도를 불신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당의 자금조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투명성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 불가리아에서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주가 누구이고 이들이 정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언론사들이 재정적으로 정부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의 색채에 영향을 받거나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 기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 불가리아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Bulgaria)는 선거 감독을 지원하고 강력한 전국적 반부패 조치를 요구하고 옹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언론 탄압의 상당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년도와 동일한 60점을 얻었다.
- 폴란드 여당은 사법제도의 체계를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준수를 거부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고 최선의 국민 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지켜봐야 할 곳

- 그리스, 체코, 이탈리아 등 올해 부패인식지수 상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국가들이 있다. 체코와 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다.
- 59점을 얻은 체코는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국가이다. 부패 인식지수가 2017년에 비해 2점, 2014년에 비해 8점 상승하기는 했지만, 체코는 최근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련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Czech Republic)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언론사 주식 보유 관련 이해관계 충돌 혐의가 밝혀졌다.
-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는 또한 농업, 건설, 물류 등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해 있는 체코 기업 아그로페르트(Agrofert)와 바비쉬 총리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유럽연합 집행기관에 제기했다. 바비쉬는 100% 아그로페르트 주식으로만 구성된 신탁기금 두 개의 유일한 수익자로,

각 신탁기금은 유럽연합 보조금으로 해마다 수백만 유로를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그리스는 2017년 48점에서 2018년 45점으로 전년대비 부패인식지수가 3점 하락했지만, 2012 대비 9점이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긴축재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몇몇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구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반부패 성과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관료제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018년에는 그리스 정부의 의약품 조달 부정 관련 스캔들이 불거졌고 전 장관들과 총리들이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 혐의를 받았다.
- 반부패 법령의 집행을 감독하는 그리스 공정경쟁위원회(Hellenic Competition Commission)에 총리의 측근 인사였던 신임 위원장이 최근 지명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신임 위원장 지명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012년에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진행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10점의 점수 상승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대비 2점 오른 52점을 기록했다. 2011년 처음으로 종합 반부패법이 통과되면서 이탈리아의 반부패 제도에 점진적 개선이 시작되었다.
- 국제투명성기구 이탈리아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Italia)는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정보의 제한과 자유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한 입법안 제안을 진행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이탈리아의 부패인식지수가 이러한 규제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적 제도 약화와 정치적 문화의 쇠퇴가 이탈리아의 반부패 노력의 미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로비 규제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권고사항

- 지역의 리더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기준이 되는 서유럽과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정체와 자만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는 서유럽과 유럽연합 지역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본권을 준수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의 통제와 법에 명시된 제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공권력이 집행되도록 법치주의 이행
 - ▲ 모든 시민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안전하게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 ▲ 효과적인 대중의 감시에 필요한 법적 투명성 및 정보 접근권 개선
 - ▲ 시민사회가 보복의 공포 없이 안전하게 정부 및 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위한 영역 확보
 - ▲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 보호
- 스페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지부와 함께 국제투명성기구는 유럽 회의 의회 대표들이 아제르바이잔 돈세탁 관련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 선거 이후로 유럽연합 집행기관 유럽 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기관들이 유럽연합 전역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기타 같은 뜻을 가진 기관들 및 시민사회와 협력 하에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의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서유럽과 유럽연합 국가들 전역에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의지와 실제 이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서유럽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반부패 공약을 지키고 청렴성의 모범사례를 몸소 보여줄 의무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명성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제도와 참정권이 약화되면서 부패 문제 지속

지역 상황

-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국가 중 소수가 점진적인 일부 진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부패 근절에 실패하고 있다.
- 70점을 얻은 아랍에미리트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했고, 카타르(62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이 지역의 최하위권에는 13점을 기록한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예멘(14점)과 리비아(17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시리아와 예멘 모두 전체 국가 중 최하위 5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39점을 기록하면서 미주지역 및 아태지역(양 지역 평균 44점)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평균 35점) 및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평균 32점)보다는 약간 나은 점수를 보였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위기

- 민주화를 위한 시도가 불가능한 과제임이 증명되는 이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억압적인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며,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수 십년 동안 깨진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 이 지역의 많은 국가 정부가 부패 근절 및 투명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 부패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정부패 행위자들이 안타깝게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관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은 정부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부분에서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취약하거나 부재한다.

- 많은 아랍지역 국가 정부에서 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공공 자금이나 국가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시민이 치른 비용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전용해 왔다. 이 때문에 반부패 노력이 그저 공허한 구호에 머물게 되고 법령이 통과되어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났다.
-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없이는 이 지역 국가 시민들의 참정권 역시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단체 혹은 활동단체에 관여하는 시민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위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불행히도 충분한 견제와 균형 혹은 독재정치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 참정권 보장 없이는 반부패 노력이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 전체에 독재 관행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점수 상승

- 올해 모로코와 이집트의 부패인식지수는 3점 상승하면서 각각 43점과 35점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점수는 양국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준이다. 세계 평균 부패인식지수가 43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모로코와 이집트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모로코 정부는 최근 수년간의 지연과 실제적 법을 제정하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오랜 요구 끝에 정보접근권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의 현재 형태로는 심각한 결함과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 모로코 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Morocco)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 2006년 이래로 국제투명성기구 모로코지부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법안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법의 최종 형태는 정보의 이용과 재이용에 대해 모호한 지시사항만을 담고 있고 또한 국방이나 대내외 보안, 민간분야 정보에 대한 일련의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전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 ‘공익’을 저해하거나 내용을 ‘왜곡’하는 정보를 재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는 이 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국제투명성기구 모로코지부의 권고사항이나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제안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통해 모로코가 반부패 의지를 가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다자간 네트워크인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7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은 전 세계 투명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부패인식 지수가 3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출국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고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있다. 행정통제위원회는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주요 기구로서 국가 자산 반환과 반부패 4개년 전략 등을 이끌어 왔다.

점수 하락

- 시리아, 리비아, 예멘, 이라크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사회 불안정과 테러, 전쟁, 충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서 부패인식지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예멘과 시리아는 지난 수 년 간 급격한 점수 하락을 보였다. 예멘은 2014년 19점에서 2018년 14점으로 지난 4년간 5점의 점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과 심각한 인권유린 및 부패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 시리아의 점수는 2012년 26점에서 2018년 13점으로 지난 8년 동안 13점 하락했다.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과 같이, 시리아의 부패인식 지수는 무장 충돌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 기관의 불안정성과 참정권 및 견제와 균형의 완전한 부재는 당연하게도 시리아의 부정부패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 수단은 2년 연속 16점을 기록했다. 테러와 전쟁, 충돌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수단은 부패인식지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8년 12월 이래로 수단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던 중 살해됐다.

지켜봐야 할 곳

- 요르단과 아 에미리트 카타르, 레바논은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국가들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이지만 이들의 지리적 혹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 49점을 기록한 요르단은 지난해 대비 부패인식지수가 1점 상승했다. 2018년 6월에는 요르단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난 수년간 이미 상당히 증가한 상태였던 부패 정부를 위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세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 시민들은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변화를 약속한 새로운 국무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모범적 거버넌스와 부패 근절을 우선시 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부는 아직도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정부의 반부패 의제 이행 시도를 모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 국제투명성기구 요르단지부(Rasheed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6(SDG 16)에 대한 요르단의 이행 노력을 검토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는 요르단 정부의 반부패 노력 개선을 위한 몇몇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반부패 기능과 시민 사회 보호의 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독립성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는 충분한 공공행정과 높은 수준의 GDP, 보건, 교육등 국가제도및 인적 발달 수준과 더 관련깊은 것으로 보인다.
-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이 지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주주의 제도와 참정권 보장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의 통제가 현 집권층의 정치적인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지는 언제든 갑자기 바뀔 수 있고 반부패 개선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 카타르 정부가 전국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면서 많은 정부조직의 청렴성을 개선시키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위층의 불투명성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난해 발간된 조직범죄·부패 보도 프로젝트(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OCCRP)와 선진국방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C4ADS)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가 돈세탁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로 부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두바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거의 아무런 질문이나 의심을 받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그 결과 두바이는 돈세탁의 천국이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기타 범죄자들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값비싼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
- 레바논에서 최근 열린 선거 결과 정당들의 자금조달과 선거절차의 악용이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 레바논지부 (Lebanese Transparency Association)는 정부 공직자와 대중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강조해왔다. 안타깝게도 선거 6개월 이후에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총리가 신임 행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 레바논에서 정치적 부정부패와 이해관계의 충돌은 아직도 주요한 국가적 문제로 반부패 노력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레바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16(SDG 16)을 향한 진전'에 따르면 레바논의 법체계와 정당의 자금조달 규제에는 투명성과 책임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가 부재하고 있다.

권고사항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반부패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제도와 참정권, 견제와 균형 및 기타 민주주의의 근간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지역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 ▲ 책임의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기자, 활동가 보호 확대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 확보
- ▲ 투명한 선거운동 자금조달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법 검토
- ▲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감독기구와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 ▲ 정보 접근권 관련 법령의 이행과 효력 보장

⑥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취약한 견제와 균형이 반부패 노력을 위협하는 중

지역 상황

- 올해의 부패인식지수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단 하나밖에 없었고, 모든 다른 국가들은 45점 이하를 기록했다. 즉, 지난 수 년 간 부패 척결에 거의 아무런 진전도 나타나지 않았다.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중 세 곳만이 세계 평균인 43점 이상을 기록했다. 조지아가 부패인식지수 58점을 얻으면서 이 지역 1위를 차지했고, 몬테네그로(45점)와 벨라루스(44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하위권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투르크메니스탄(20점)과 우즈베키스탄(23점), 타지키스탄(25점) 등이 위치한다.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평균 35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32점을 얻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뒤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했다.
- 이처럼 암울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편한 현실이 드러난다. 부패 인식지수 점수가 낮은 부패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취약하고

그 시민들의 참정권과 시민권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위기

-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 이 지역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민주주의 제도와 기준이 현재 독재정치 등의 위협에 처해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각국 정부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부정부패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 제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 부정부패는 민주주의 관행이 취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약하고 이 때문에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사위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나 활동가 단체들과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부패는 집권 정치인들이 민주화나 제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
- 소련의 붕괴 이후 이 지역 많은 국가들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민간 인사나 단체들이 정부 결정에 예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이 부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묵적인 로비 관행이 묵인되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은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유럽연합 가입후보국들과 잠재 후보국 혹은 현재 유럽연합과 신규 가입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 7개국 중 4개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것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엄격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의 많은 국가 정부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많은 국가들이 선거운동과 정당의 자금조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탐사보도 기자나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고 있다.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부패 근절의 가장 큰 장애물은 권력을 가진 인사들과 단체가 국가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현실이다.
- 이 지역 전체에 충분한 견제와 균형 없이는 국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고 비민주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이 정치적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제기구, 국제협약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으며 부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점수 상승

- 이 지역의 낮은 부패인식지수를 고려했을 때, 부패 근절에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적어 보인다.
- 유럽연합 가입후보국인 알바니아는 2013년 31점에서 2018년 36점으로 지난 5년간 5점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는 2점이 하락했는데, 몇몇 반부패 개혁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담보상태가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법심사 절차와 반부패 제도 체계가 거의 완성된 지금 알바니아의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향후 얼마나 향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점수 하락

- 올해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거나 정체된 국가에는 아제르바이잔(25점), 러시아(28점), 카자흐스탄(31점), 코소보(37점), 세르비아(39점), 몬테네그로(45점) 등이 있다.
- 아제르바이잔은 시민사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7년 31점에서 2018년 25점으로 점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수년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 아제르바이잔 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Azerbaijan)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와 같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민이 단결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억제하고 있다.

- 2017년 9월에 조직범죄와 부패 보고 프로젝트(OCCRP)가 발간한 보고서는 미화 29억달러 규모의 돈세탁과 아제르바이잔의 집권 정치인들이 운용한 비자금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돈세탁 작전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아제르바이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러시아는 취약한 참정권과 시민권 및 비효율적인 견제와 균형 제도로 인하여 2017년에 비해 1점이 하락한 28점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점수는 정부의 실질적 반부패 행동 역량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들 사이의 신뢰 부족을 증명하고 있다.
- 러시아의 사회·정치 절차에 있어서 정실인사가 여전히 근본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독립 비정부기구와 독립 언론이 흔치 않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대체되고는 한다. 법원이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체들이 정부 아젠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부당한 적용이 실제로 발생한다.
- 예를 들어 201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광업대학 총장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 학술 고문이었던 블라디미르 리트비넨코(Vladimir Litvinenko)가 공금 유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출간했다는 이유로 국제투명성기구 러시아 지부(TI-Russia)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
- 법원은 리트비넨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TI-Russia의 조사가 사실적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와 동시에 리트비넨코의 공금 유용 혐의를 폭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TI-Russia에게 백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 TI-Russia는 러시아 시민들의 온라인 기부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백만 루블을 조달하여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을 납부했다.

- 유럽회의의 일부분인 부패에 관한 형사법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등 국제협약 조인과 그 감시기구인 부패에 대항하는 국가 협의(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 가입 및 2016년 반부패 정상회의에서의 공약 등을 통하여 러시아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도 진전을 이룬 것 같이 보인다. 시민과 민간 부문 주체들이 부정부패 사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역시 로비 규제 이행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우선순위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대비 2점 하락한 39점을 기록한 세르비아에서는 법치주의 유지를 위한 기관과 제도를 정부가 계속해서 침해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진했다.
- 또 다른 사례로, 세르비아 정부는 국영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접근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정부 공언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의 새로운 언론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언론인 단체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 세르비아 지부(Transparency Serbia)는 반부패 방안과 독립 감시기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세르비아 지부는 반부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가입 요건 이행을 감독하고 민주주의·반부패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정부기구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 코소보는 2017년 대비 2점 하락한 37점을 기록했다. 코소보의 가장 심각한 반부패 관련 문제점에는 미흡한 투명성, 취약한 제도와 법치주의, 시민 참여 부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코소보지부(Kosova Democratic Institute, 코소보 민주주의 연구소)는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정당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지지

하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대비 1점 하락한 45점을 기록했다. 유럽연합 가입에 진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는 아직도 법치주의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정당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우려 및 금융정보 공개의 미흡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 20년 이상 동일한 정치인들이 집권해 온 몬테네그로에서는 민간 유력인사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 몬테네그로지부(MANS)는 법치주의의 강화와 자유로운 정보 공개 개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켜봐야 할 곳

- 터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의 상황은 향후 수년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정치 지형은 매우 복잡하며, 아르메니아 정부만이 긍정적인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36점으로 변화가 없지만, 최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 상황 전개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부정행위와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 10월 선거 이후 바나루카(Banja Luka)시의 지역 검사가 정치인 밀로라드 도딕(Milorad Dodik)이 선거운동 중 유권자들에게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 최근에는 바나루카시 당국이 평화 시위대를 공격하고 야당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체포했으며,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의 참여에 대한 탄압으로 연결된 선거운동 부정행위 의혹의 분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Bosnia and Herzegovina)는 검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선거운동 자금조달 감시, 시민의

부정부패 신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조지아는 지난해 대비 2점 상승한 58점을 기록했지만, 현재 민주주의의 퇴보를 겪으면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조지아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는 무엇보다도 법 집행의 책임성 부족, 사법부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개입, 유력인사들의 국정 개입, 시민 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공격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부의 부패와 부정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한 독립 기관을 창설하는 데 실패했다.
- 부패를 저지른 인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지아 지부 (Transparency International Georgia)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의 36%가 공직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12%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조지아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대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민사회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노력의 진전은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역행할 것이다.
- 2017년 30점에서 2018년 32점으로 2점 상승을 기록한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시작된 반부패 개혁의 이행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평균 점수인 43점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얻었다.
- 법적·제도적 반부패 체계가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진전은 너무나 더디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창설된 반부패 기구는 다수의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위인사도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지 못했다.
-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환멸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개혁의 결과에 대해 몹시 실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상황 개선 역량을 거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성과 독립성이 부패의 억제와 정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반부패 법령이 실질적 결과를 내는 데 수 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부패 노력의 진전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득권층의 반발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

- 많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잘 설계된 법령을 입법한 상태이고 이러한 법령이 반부패 노력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법령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부정부패는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갈 기회가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 언론의 자유와 단결권, 시위의 권리를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 제공
 - ▲ 정부 지출 감독에 국민 참여
 - ▲ 사법제도 개혁과 전체 정부 기관의 청렴성과 책임성 개선
 - ▲ 성공적인 반부패 노력의 전제조건으로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